



사진=민주노총

1% 재벌을 위한 성과연봉 · 강제퇴출 노동개악 99%를 위한 공동파업으로 끝장내자!

박근혜의 답 없는 질주

박근혜 정권이 폭주하고 있다.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내모는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5년 선고를 내리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 불법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강제퇴출제를 밀어붙이고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요구 활동을 범죄시하고 있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공공부문은 노동개악의 선봉에 서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120개 중 절반 이상에서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이 이루어졌다.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까지 강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철도 민영화 계획도 발표했다.

박근혜 정권은 작년 임금피크제 도입처럼 공공노동자를 “철밥통”으로 낙인찍어 고립시키고, 임금동결과 경영평가 성과급이라는 당근과 채찍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상황은 작년과 다르다. 박근혜 정권의 공격은 강해 보이지만 지지기반이 허약하다. 무엇보다 공공노동자의 공동전선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노동자가 단결하여 효과적인 반격에 나선다면, 끝을 보는 것은 노동자가 아닌 박근혜 정부일 것이다.

공세적 투쟁이 필요하다

정부의 압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를 수용한 기관은 적다. 합의한 기관 대부분은 과반노조가 없거나 또는 이미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이다. 노동조합의 합의 거부에 정부와 기관장은 이사회 일방 의결이라는 불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불법의결로 정부의 정당성은 크게 훼손된 반면 공동전선은 더욱 강력해졌다.

앞으로 정부는 조합원 흔들기를 본격화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공세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법률 대응이나 버티기만 일관한다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조직력이 약한 기관부터 무너지며 연쇄적인 전선 이탈이 재연될 수 있다. 또한 고발이나 소송 등 법률 대응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정치적 압박에 의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정부의 개별 기관에 대한 노사합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막아 내기 위해서는 합의 거부 등 버티기로 일관하거나 법률

대응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세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위력적 공동파업으로 승부를 내자

이번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은 위력적 공동파업으로 정부를 꺾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돌파구는 없으며, 정책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자투쟁과 사회적 연대로 정부를 압박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힘은 공동파업 수준의 투쟁을 통해서만 만들어 질 수 있다.

최대한 많은 수의 사업장이 쟁의권을 확보하고 파업투쟁 조직에 들어가야 한다. 파업의 경험이 적으면 앞장서기 두려울 수 있다. 조직력이 강한 노동조합이 앞장서는 것도 중요하고 최대한 많은 수의 노동조합이 이와 동행하기 위한 각자의 결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조직의 상황보다는 최대한 많은 수의 조직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파업 일정과 전술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사업장의 투쟁력과 교섭력을 극대화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공동 행동으로 대정부 투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99% 노동자 살리기에 앞장서자

청년실업과 노동시장 불평등은 재벌의 탐욕과 정부의 잘못된 노동유연화 정책이 만들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지만 언제까지나 거짓이 통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완전히 사기라는 여론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사기를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공부문이 공공부문답게 운영되기 위한 요구와 투쟁에 공공기관 노동자가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낙하산 인사와 관료 통제가 아닌 민주적이고 공공성 중심 공공기관 운영 개혁, 경제위기 시대 공공부문이 사회안전망과 고용창출에 적극 역할을 하도록 하는 투쟁에 공공기관 노동자가 앞장서야 한다.

여러 사회단체들이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성과-퇴출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을 결성하여 함께 투쟁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모든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연대해 노동개악의 예봉을 꺾고,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는 투쟁에 나서자.

사드 도입이 핵전쟁을 불러온다 사드 배치 반드시 막아내자!

성주 주민 경찰수사?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항의하는 성주 군민들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또 다시 “폭력시위”나 “외부단체 개입” 이니 뻔한 논리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 7월 15일 경북 성주를 방문한 황교안 총리에게 계란과 물병을 던진 성주 군민들을 폭력행위처벌법으로 엄단하겠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대체 분노해야 할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사드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한 채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아직 그 안전성이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 전자파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유해성 검사를 하기보다 “100m 바깥부터는 안전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 정부가 인용하는 것은 미군의 2010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지만 2012년 육군교범에는 1만평(약 33,000㎡)을 엄격한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미군의 자료에서도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사드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대상이다. 억지를 부리는 것은 정부다.

군비경쟁의 악순환 불러올 사드

사드는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 주장하지만, 사드야말로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예전부터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에 적국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완벽한 방어망’, 즉 미사일

방어(MD) 체제를 갖추길 원했다. 이미 1999년 미 국방부의 한 보고서는 동아시아 미군을 방어하기 위해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완벽한 방어망을 가지고 있다는 환상은 역으로 선제공격 의지를 부추긴다. 만약 핵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사드의 보호를 받는 미군은 상대적으로 핵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더 호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북한, 중국, 러시아라고 모르겠는가? 당장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되자 중국은 “한국은 타격 대상이 되었다”고

밝혔고, 러시아도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부대를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는 당연히도 동북아시아의 핵군비경쟁을 강화시킬 뿐이다. 사드로 인해 남한 민중들은 원치 않는 강대국들의 경쟁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성주를 고립시켜선 안 된다.
노동자가 막아내자!

박근혜 정부와 보수언론은 성주에 “불온한 외부세력”이 개입해선 안 된다며 성주 주민들의 운동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의 평화롭게 살 권리는 위협받는다. 안보 공포를 조장하며 우리의 권리를 짓밟아온 저들에게 미래의 평화마저 짓밟히게 놔둘 수는 없지 않겠는가?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저들에 맞서 한반도 평화를 외치는 모든 이들이 모여 성주 주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 투쟁에 연대하자.

당장 7월 23일 6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모이자. 한반도 민중의 평화를 파괴하는 무기, 미국의 핵전쟁을 위한 무기, 사드를 노동자가 나서서 막아내자!

재벌의 노조파괴에 맞서 민주노조 지켜내자



이름만 바꿔 다시 나타난
노조파괴 청부업자

2016년, 다시 노조파괴 바이러스가 확산되려 하고 있다. 2011년부터 노조파괴로 악명을 떨쳤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이름만 바꾼 채 다시 나타난 것이다. 불법행위로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박탈되었던 창조컨설팅 대표 심중두는 경영지도사라는 이름으로 노조파괴 공작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노무사 자격박탈

이 해제된 올해 7월, 글로벌 원이라는 노무법인을 등록했다. 창조컨설팅에서 근무했던 김형철은 노무법인 예지 대표노무사로 갑을오토텍에서 용병을 동원한 노조파괴를 벌이기도 했다.

노동자 죽음으로 내몬 노조파괴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만도, 보쉬전장,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한진중공업 등 민주노총 금

속노조 소속 사업장 노조파괴의 주범이었다. 어용노조 설립, 공격적 직장폐쇄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통해 노조를 갈라놓았다. 금속노조 사업장 뿐 아니라 영남대병원, 골든브릿지 등 다수의 민주노총 사업장에서도 노조파괴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 168개나 이른다.

노조파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탄압, 차별, 폭언, 폭력들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었다. 심지어 유성기업에서는 지난 3월 17일 한광호 열사가 지속적인 노조파괴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동조합 지켜내고 인간답게 일하자

노조파괴 시도에 맞선 투쟁을 기세있게 하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쪼먹는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노조파괴 컨설팅 업체를 고립시키자. 복수노조를 이용하여 어용노조를 만들고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우자. 다시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민주적 노동

조합운동을 되살리고,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

노조파괴 컨설팅을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려는 재벌기업에게 투쟁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재벌들의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복수노조 창구단 일화 제도를 폐지하는 사회적 요구를 만들어내자.

갑을오토텍 투쟁이 말해주는 바

7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총파업에서 그 저력을 보여주자. 최근 갑을오토텍 박효상 회장 법정구속과 창조컨설팅의 출신이 만든 노무법인 예지의 설립인가 취소는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만이 해결책을 보여주었다.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노동자들 뿐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전염병 같은 악질 바이러스를 몰아내고 일터에서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지켜내자.